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경기침체가 최저소득층 시장소득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 최근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다소 높아진 반면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청년 및 노년층의 소득비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 대학졸 이상 또는 전문직의 소득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집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소득의 구성에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산층의 소비가 급감한 반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소비는 큰 변화가 없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소비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보건 지출 비중이 높아졌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 최근 부동산자산가치 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은 커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한국은 2020년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최근 3년간 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 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이다(소득 기준 2011~2019년).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연간자료 및 분기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2.7%, 2017년 2.8%에서 경제성장이 낮아짐에 따라 2018년 1.5%, 2019년 2.4%로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¹⁾ 여기서는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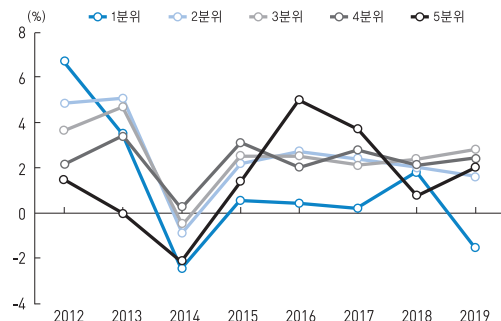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림 VI-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가구 구성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실질증가율은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표본의 균등화소득을 기초로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다.

[그림 VI-1]을 보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의 실질소득은 큰 등락 없이 각각 연평균 2.2%, 2.5%, 2.5%의 안정적인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소득 5분위 역시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 평균 0.3%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1.5%로 급락했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최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VI-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놓고,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각 가구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후소득인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실질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9.2%이고 5분위 소득비는 210.1%이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011년 221.4%에서 2019년 201.9%로 감소하였다.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9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6.6	55.5	81.5	114.9	221.4
2012	27.1	56.2	82.2	114.6	219.9
2013	27.9	58.0	84.2	116.0	214.0
2014	28.6	58.7	85.0	117.4	210.4
2015	29.8	59.8	85.9	119.1	205.6
2016	29.7	59.6	85.7	117.6	207.3
2017	29.8	59.8	85.2	117.9	207.2
2018	31.1	60.8	86.1	118.4	203.6
2019	32.3	61.7	86.7	117.4	201.9
2011~2019 평균	29.2	58.9	84.7	117.0	210.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소득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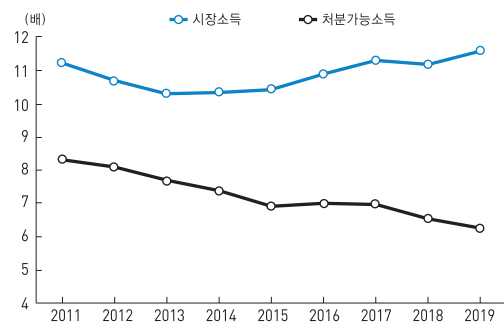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VI-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의 소득 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2013년 10.3배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1.3배, 2019년 11.6배를 기록하였다. 기술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와 더불어 여성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맞벌이소득 가구비중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6.3배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이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VI-3]에서는 36개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수준이 OECD 선진국들의 소득수준에 근접해 감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8.1배에서 2018년 6.5배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된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세후기준 소득분배가 유의하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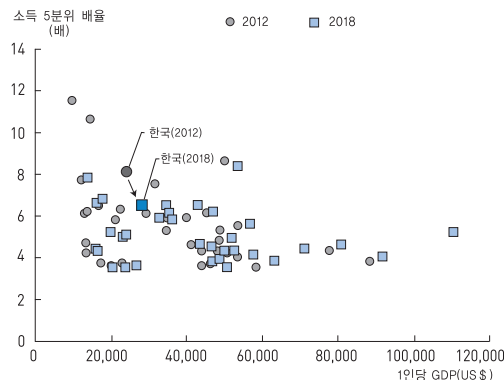
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적이전 이 주로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계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대부분이 세전 임금격차 확대는 인지하는 반면 세후소득 기준 소득분배의 변화추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에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다.²⁾ 또한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들의 소득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을 가구원 수로 표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특성 집단 간 맞벌이 가구 비율과 1인가구 비율의 차이와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VI-4]는 2011~2019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의 평균 수준

[그림 VI-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2, 2018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OECD 자료 활용. 단, 2012년 한국 자료의 경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2) 1인당 GDP는 2010년 미국 달러 고정가격 기준임(World Bank 자료 활용).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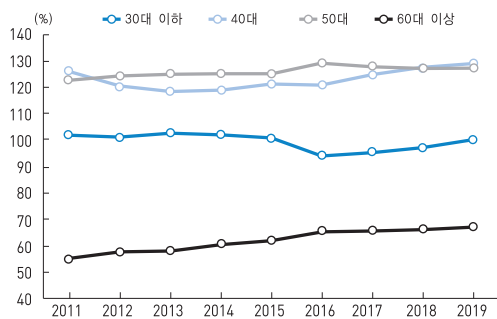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고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최근 2016년에서 2019년 기간에 각 연령대별 소득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30대 이하는 94.3%에서 100.2%로, 40대는 120.8%에서 129.1%로 유의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28.9%에서 127.4%로 60대 이상은 65.6%에서 67.3%으로 정체되어 있다.³⁾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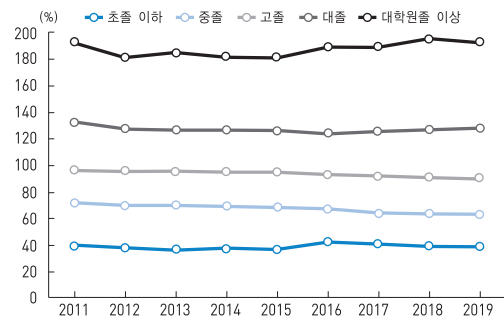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VI-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의 소득비는 감소한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의 소득비는 증가했다.

초졸 이하 집단은 42.1%에서 38.4%로, 중졸 집단은 67.0%에서 62.8%로, 고졸 집단은 93.0%에서 90.5%로 낮아진 반면 대졸 집단은 124.1%에서 127.9%로,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같은 기간 소득비가 189.2%에서 192.5%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처럼 대학 이상의 학력집단의 소득비는 상승하는데 반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집단의 소득비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거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학력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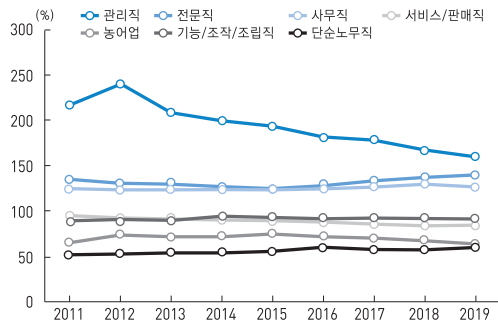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VI-6]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6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의 기간에 전문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소득비는 유의하게 하락했다.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관리직의 소득비는 181.7%에서 160.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능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소득 계층으로 간주되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경상소득에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시장소득의 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대상 가구 전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직업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

하는 비율이 85.0%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64.9%,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8.0%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2016-2019년 기간 동안 1인가구의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7.9%, 12.5%, 11.7%에서 5.8%, 10.0%, 10.8%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는 53.1%에서 58.2%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20대 이하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9.4%에서 2019년 64.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17년 61.4%에서 2019년 61.0%로 다소 하락하였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다시 가족 간 이전,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

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6년과 2019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에서 64.0%로 정체된 반면 사업소득은 22.2%에서 19.4%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소득은 6.5%에서 7.0%로,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은 6.0%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연금 및 임대소득의 증가와 공적이전이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7]에 제시된 2019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4.8%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5%와 69.6%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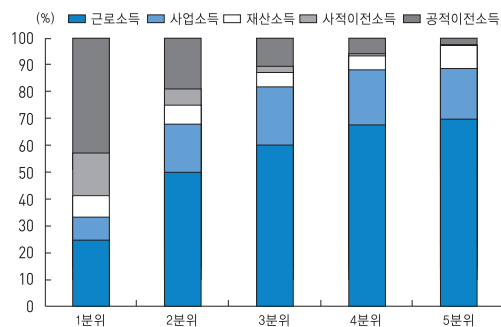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16년 37.0%에서 2019년 42.8%로 크게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VI-2〉의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20대 이하, 30대에 비해서 40대 이상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다.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상당수가 은퇴시점을 넘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VI-2〉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19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2016년					
20대 이하	87.6	6.4	1.2	2.8	2.0
30대	78.9	16.0	2.2	0.7	2.2
40대	70.1	24.0	3.6	0.6	1.8
50대	66.1	25.5	5.8	0.5	2.1
60대 이상	40.1	20.2	14.7	4.6	20.4
2019년					
20대 이하	78.4	13.5	1.4	3.4	3.3
30대	78.5	14.7	2.7	0.8	3.3
40대	70.6	22.0	4.5	0.7	2.2
50대	70.6	20.2	6.0	0.7	2.5
60대 이상	42.2	18.3	13.2	4.7	21.7

[그림 VI-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0.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87.6%에서 78.4%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6.4%에서 13.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소득원천별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구별되며 20대 이하 가구의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 소득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그중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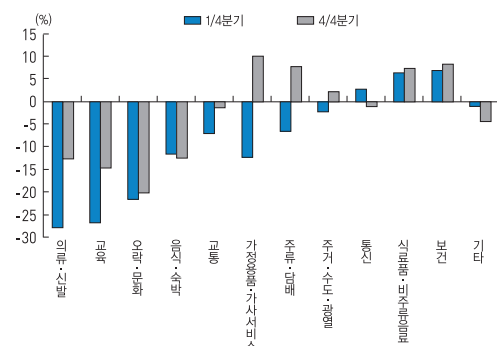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충격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에게 어떤 지출패턴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연간 및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20년 1분기와 4분기의 실질 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2.8% 감소했다. 소득 2분위,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각각 -3.3%, -6.8%, -4.2%로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고 1분위의 소비는 2.8% 증가했다. 최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로 소비해 온 이유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고소득층은 오락·문화, 교육, 의류·신발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보건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항목간 대체소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소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는 교육, 교통, 오락·문화, 의류·신발, 음식·숙박 항목에서 크게 소비가 감소하여, 각 소득분위별로 소비지출의 변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8]에서 평균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의류·신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통 등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감소가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교육은 상당히 비탄력적인 소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원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정용

[그림 VI-8]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 2020.4/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20.

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비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대외활동의 제약과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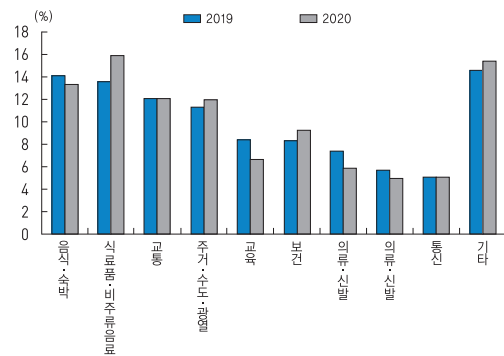
반대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 지출은 초기 증가세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재택시간의 증가와 보건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20년까지 연간자료가 이용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소비지출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VII-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여준다.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교육 지출 비중이 8.3%에서 6.6%로, 오락·문화 7.3%에서 5.8%로, 음식·숙박 14.1%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5%에서 15.9%로, 보건의 비중은 8.2%에서 9.2%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대면 서비스 위주로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재택 관련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

[그림 VII-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9, 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육, 의류·신발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의 비중이 증가했다. 20대에서는 교통, 30대와 40대에서는 교육, 50대와 60대에서는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의식주⁴⁾ 지출 비중은 2019년 30.4%에서 2020년 32.7%로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

가구 비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VI-3>을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2016년 17.5%에서 2019년 18.7%로 다소 늘었다.

4)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 그리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의 합이 11.2%에서 12.0%로 증가한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2분위가 2.2%, 3분위가 2.6%, 4분위가 3.6%, 5분위가 9.5%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019년의 조세부담률은 4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해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 비중 또한 4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 유의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VI-3〉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6, 2019

	전체	비소비지출 (%)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6년						
전체	17.5	5.6	5.6	1.9	1.3	3.1
1분위	13.3	1.9	4.0	2.1	1.6	3.7
2분위	14.6	2.1	5.2	2.2	1.4	3.7
3분위	15.6	2.6	6.0	2.0	1.3	3.7
4분위	15.6	3.2	6.2	1.8	1.2	3.2
5분위	20.0	8.8	5.4	1.8	1.2	2.7
2019년						
전체	18.7	6.0	6.0	2.5	0.9	3.3
1분위	12.7	1.8	3.2	3.6	1.0	3.1
2분위	14.3	2.2	4.7	2.9	1.0	3.6
3분위	15.6	2.6	5.8	2.7	1.0	3.5
4분위	17.0	3.6	6.5	2.4	0.9	3.6
5분위	21.9	9.5	6.2	2.2	0.9	3.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자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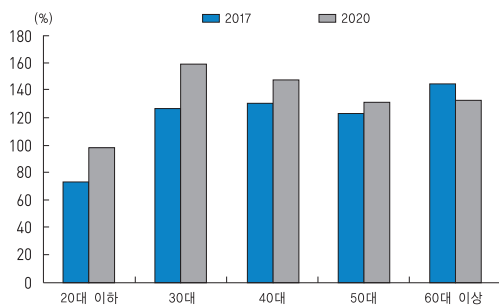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본다. 2020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63.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7년 63.5%와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2.0%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9.6%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2%와 45.2%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9.4%로 2017년 129.6%보다 다소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는 151.2%에서 151.7%로, 2분위는 144.1%에서 146.8%, 3분위는 141.0%에서 146.7%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4분위는 132.0%에서 140.0%로, 5분위는 120.0%에서 134.1%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대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20.0%이며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차이가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20대 이하는 59.2%로 낮은 편이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77.8%와 77.2%로 매우 높다. 다시 50대는 72.9%로 낮아지고 60대 이상에서는 46.7%로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

에 따른 주택구입과 주택담보대출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림 VI-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대 이하, 30대, 40대에서 크게 상승하였고 50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 20대 이하, 30대, 40대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45.4%, 45.7%, 31.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림 VI-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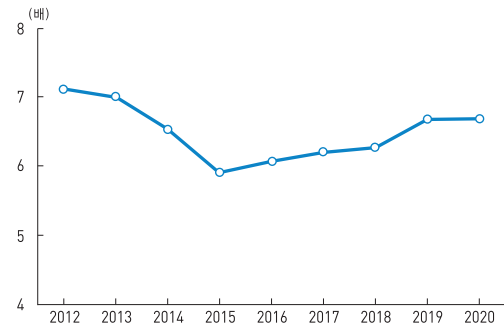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대비 부채 비율=총 부채액÷연간 경상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4.9% 증가하였는데,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8.9% 증가에 그친 반면 나머지 분위는 2분위 17.2%, 3분위 14.0%, 4분위 11.4%, 5분위 17.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다.⁵⁾ 2020년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

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6.5%이고 5분위는 43.8%이다.

[그림 VI-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분위 대비 5분위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2017년 6.2배에서 2020년 6.7배까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자산가격 상승이 각 소득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전체 가구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비중은 69.5%인데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보유 비율은 48.7%인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의 보유 비율은 89.9%에 달한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1분위에서는 11.0%만 증가한 반면, 5분위에서는 22.8%로 크게 증가해 순자산 배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자료로만 작성된 2016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